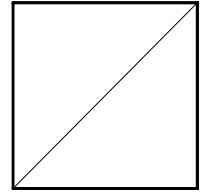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55 호
의 결 연 월 일	2022. 3. 2. (제 4 차)

의
결
사
항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 원 장 고 승 범
제출 연월일	2022. 3. 2.

1. 의결주문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정기 종합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임원 선임·해임 사실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 의무 위반’, ‘금융거래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영업점의 사모펀드 등 불완전판매’,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중소기업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 의무를 소홀히 한 임직원에게 대하여 과태료 부과, ‘주의’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등으로 조치요구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다. 관계부서 협의

- ☐ 제29차 제재심의위원회(2021.8.26.) 심의필
- ☐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2021.12.1.) 심의필
- ☐ 제4차 안전검토 소위원회(2022.2.24.) 심의필

<별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1억 6,060만원 부과

- 조치사유 : 임원 선임·해임 사실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3,560만원,
영업점의 사모펀드 등 불완전판매 1억 500만원*,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2,000만원

* ①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신탁업자) 1,500만원, ②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 9,000만원

- 법적근거 : (舊)「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2017.10.19. 시행 전의 것) 제43조(과태료) 제3항 제1호 및 제2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43조(과태료) 제2항 제1호의2, 제1호의3
(舊)「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10.19. 시행 전의 것)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2>,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2>
「자본시장법」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22]
「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과태료) 제1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3]
(舊)「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및 <별표3>

□ 임직원에 대한 조치

- 인사부장 ○○○에 대하여 과태료 480만원, 前 비서실장 ○○○에 대하여 과태료 560만원, 비서실장 ○○○에 대하여 과태료 480만원 각각 부과
 - 조치사유 : 임원 선임·해임 사실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 IT금융개발부 차장 ○○, IT금융개발부 차장 ○○○, 프로세스혁신부 차장 ○○○, 프로세스혁신부 팀장 ○○○, 프로세스혁신부 팀장 ○○○, 프로세스혁신부 팀장 ○○○, IT금융개발부 팀장 ○○○, IT금융개발부 팀장 ○○○에 대하여 각각 “주의”로 조치
 - 조치사유 :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 의무 위반
- 동탄서지점 팀장 ○○○에 대하여 “주의”로 조치
 - 조치사유 : 금융거래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 본부장 ○○○에 대하여 “주의”로 조치
 - 조치사유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중 정보보호위원회 운영 업무 위반

- 관련 직원에 대하여 중소기업은행장에게 통보하여 조치대상자 및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조치
- 조치사유 : 영업점의 사모펀드 등 불완전판매,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중 전산원장 변경통제 위반 및 내부사용자 비밀 번호 관리 위반
- 법적근거 : (舊)「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2017.10.19. 시행 전의 것) 제43조(과태료) 제3항 제11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43조(과태료) 제3항
(舊)「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10.19. 시행 전의 것)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2>,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2(행정처분) 제3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2항, 제424조(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제3항
「전자금융거래법」 제39조(감독 및 검사) 제6항
「중소기업은행법」 제46조(감독)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조(적용범위) 제2항 및 제3항,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제1항 제5호,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제1항 및 제2항

2. 조치사유

가. 임원 선임·해임 사실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함)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을 포함)한 경우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금융회사 및 해당 금융회사가 속하는 협회(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2017.9.5.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 전에는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함

- 중소기업은행은 ●●● 등 14명(15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임원의 선임 및 사임 사실을 기한 내에 중소기업은행 및 은행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임원 선임·해임 보고 및 공시 위반 내역 >

순 번	성 명 (임원종류)	선임(연임), 해임(사임)	사유 발생일	기한일	공시일		보고일
					은행 홈페이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①	●●● (미등기임원)	선임	2017.1.21.	2017.2.2.	미공시	미공시	미보고
②	●●● (미등기임원)	선임	2017.1.21.	2017.2.2.	미공시	미공시	미보고
③	●●● (미등기임원)	선임	2017.1.21.	2017.2.2.	미공시	미공시	미보고
④	●●● (미등기임원)	사임	2017.2.20.	2017.2.28.	미공시	미공시	미보고
⑤	●●● (미등기임원)	선임	2017.2.21.	2017.3.2.	미공시	미공시	미보고
⑥	●●● (사외이사)	선임	2017.5.26.	2017.6.5.	2017.5.26.	지연공시 (2017.7.26.)	2017.6.1.
⑦	●●● (미등기임원)	선임	2017.7.15.	2017.7.25.	2017.7.15.	지연공시 (2017.7.26.)	2017.7.21.
⑧	●●● (미등기임원)	선임	2018.7.17.	2018.7.25.	지연공시 (2018.11.21.)	지연공시 (2018.10.15.)	2018.7.23.
⑨	●●● (등기임원)	선임	2019.3.27.	2019.4.4.	2019.3.27.	지연공시 (2019.7.24.)	2019.4.1.
⑩	●●● (등기임원)	선임	2019.3.27.	2019.4.4.	2019.3.27.	지연공시 (2019.7.24.)	2019.4.1.
⑪	●●● (미등기임원)	연임	2019.10.10.	2019.10.18.	지연공시 (2020.2.12.)	지연공시 (2020.2.12.)	2019.10.18.
⑫	●●● (미등기임원)	연임	2020.1.15.	2020.1.23.	지연공시 (2020.2.12.)	지연공시 (2020.2.12.)	2020.1.22.
⑬	●●● (미등기임원)	연임	2020.7.17.	2020.7.27.	2020.7.23.	지연공시 (2020.11.18.)	2020.7.24.
⑭	●●● (미등기임원)	선임	2020.7.23.	2020.7.31.	2020.7.23.	지연공시 (2020.11.18.)	2020.7.28.
⑮	●●● (미등기임원)	선임	2020.7.23.	2020.7.31.	2020.7.23.	지연공시 (2020.11.18.)	2020.7.28.
⑯	●●● (미등기임원)	선임	2020.7.23.	2020.7.31.	2020.7.23.	지연공시 (2020.11.18.)	2020.7.28.

< 관련법규 >

「지배구조법」 제7조 제2항 및 제3항

(舊)「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2017.9.5.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2항 제1호 및 제2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2항 제1호 및 제2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조

나.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 의무 위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 IT금융개발부 및 프로세스혁신부는 2015.5.27.~2020.1.10. 기간 중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면서 해당 명의인에게 거래정보 제공사실 등을 미통보(1,366건)* 하거나 지연통보(23,074건)**한 사실이 있음(총 24,440건 위반)

* IT금융개발부가 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업무를 담당했던 2017.7월까지의 담당직원이 우편 발송 업무를 담당하는 DM센터로 통보자료 전송을 누락함에 따라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프로세스혁신부로 통보업무가 이관된 2017.8월 이후에는 통보자료 결재시 DM센터로 전송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였으나 동 전산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통보가 일부 누락되는 설계상 오류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점검을 소홀히 하였고, 통보업무 처리 과정상 명의인에게 정상적으로 통보되었는지 여부를 사후 확인하지 아니하여 미통보 사례가 다수 발생

** 2019년 감사원이 중소기업은행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미통보 사실이 발견되어 2019년 이후 미통보 건에 대해서는 2020.3월 중소기업은행이 일괄 사후 통보 하였음(2020.3.13. 978건, 2020.3.24. 22,096건)

<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의무 위반 내역 >

조치 대상			위반 건 (계)	미통보	지연통보	위반 기간
IT금융 개발부	행위자	차장 ○○	61	61	-	2015.5.27.
	감독자	팀장 ○○○				
	행위자	차장 ○○○	123	123	-	2017.7.14.
	감독자	팀장 ○○○				
프로세스 혁신부	행위자	차장 ○○○	-	-	-	2018.3.27. ~ 2020.1.10.*
		팀장 ○○○	213	213	-	2018.3.27.
		팀장 ○○○	969	969	-	2018.8.14. ~ 2018.9.17.
		팀장 ○○○	23,074	-	23,074	2019.3.27. ~ 2020.1.10.
		계	24,440	1,366	23,074	-

* 차장 ○○○는 IT금융개발부에서 프로세스혁신부로 통보업무 이관시 전산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통보가 일부 누락되는 설계상 오류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점검을 소홀히 하여 2017.8월 이후 통보의무 위반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음

< 관련법규 >

「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1항

다. 금융거래실명확인 의무 위반

- 「금융실명법」 제3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명의인의 가족으로서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유효한 가족관계 확인서류로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 동탄서지점에서는 2017.6.30.~2017.8.31. 기간 중 계좌 개설 담당직원 (1명)이 가족 대리인의 자격으로 가족(배우자, 자녀) 2명 명의의 “IBK 평생주거래기업통장(보통예금)”등 총 2개 계좌(1천만원)를 개설하면서 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만 제출받아 확인하고, 가족관계 확인서류(주민 등록등본 등)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는 확인·징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가족명의 계좌 대리 개설 내역>

(단위 : 원)

실/명확인지점	계좌번호	명의자	개설일자	거래금액	신청인	위반사실	행위자
동탄서	607**42020****	○○○○	2017.6.30.	0	부친 ○○○	가족관계확인서류, 대리인 증표 미확인	팀장 ○○○
동탄서	607**44844****7	○○○○*	2017.8.31.	10,000,000	배우자 ○○○	상동	팀장 ○○○

* 2017.8.31. 개인명의(○○○○) 계좌 신규 개설 후 2017.9.26. 법인으로 전환하여 현재 명의인은 (주)○○○○○

< 관련법규 >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및 제7항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의2 제1항

라. 영업점의 사모펀드 등 불완전판매

(1)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가)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투자중개업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71조 제5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중소기업은행 △△△△센터 등 4개 영업점에서는

2018.9.6.~2019.4.29. 기간 중 총 4명의 투자권유직원들이 관련 투자권유자격증*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일반투자자 10명(개인 6명, 법인 4개 업체)에 대하여 “포트코리아Aviation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 등 펀드 10건(21억원)을 투자권유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음

* 투자권유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유형에 따라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구분하며, 투자자를 상대로 펀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자는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여야 함 (「자본시장법」 제286조,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1-3조)

(나)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신탁업자)

□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중소기업은행 △△△△지점에서는

2019.12.3. 1명의 투자권유직원이 관련 투자권유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투자자 1명(개인)에 대하여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ELS)삼성증권 제23231회 주가연계증권” 특정금전신탁 1건 (1억원)을 투자권유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음

- * 투자권유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유형에 따라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구분하며, 투자자를 상대로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자는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286조,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1-3조)

(2)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제108조 제9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 및 신탁업자는 부적합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녹취대상 상품**을 판매(또는 신탁계약체결)하는 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하거나 녹취된 파일을 해당 투자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녹취대상상품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舊)「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2021.2.9. 대통령령 제31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舊)자본시장법 시행령」(2021.2.9. 개정전)이라 함) 제68조 제5항 제2호의2 가목]

** 파생결합증권 및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舊)「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2021.3.23.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舊)자본시장법 시행령」(2021.3.23. 개정전)이라 함) 제52조의2 제1항 제1호·제3호], 파생결합증권이나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舊)「자본시장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의2(2021.2.9. 개정전) 제109조 제3항 제1호의2]

- 중소기업은행 △△△지점 등 14개 영업점에서는 2018.2.8.~2019.12.12. 기간 중 총 17명의 직원들이 부적합투자자 14명 및 70세 이상 일반투자자 5명 등 총 17명(2명 중복)에 대해,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HDC유럽스태빌리티사모31호 [ELS-파생형]” 등 펀드 10건(8.5억원)과 파생결합증권에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ELS)한화스마트 사모 제5652회

파생결합증권” 특정금전신탁 8건(13.2억원) 등 총 18건* (21.7억원)을 판매 (또는 신탁계약체결)하면서 그 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부적합투자자대상 판매건 15건, 70세 이상 일반투자자 대상 판매건 5건(2건 중복)

< 관련법규 >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2021.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2 제1항

「자본시장법」 제71조 제5호 및 제7호, 제108조 제9호

(舊)「자본시장법 시행령」(2021.3.23. 개정전) 제52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舊)「자본시장법 시행령」(2021.2.9. 개정전) 제68조 제5항 제2호의2 가목·나목, 제109조 제3항 제1호의2·제10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28호

마.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1) 전산원장 변경통제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7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장애 또는 오류 등에 의한 전산원장의 변경시에는 변경 전후내용 자동기록 및 보존, 변경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한 제3자 확인 등이 포함된 전산원장 변경절차를 수립·운용하여야 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 제1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과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부주문의 경우에는 원장 등 중요 데이터 변경을 금지하여야 하는데도,

- 중소기업은행은 2016.12.23.~2020.11.30. 기간 중 통합단말 업무처리 시스템을 통해 전산원장을 변경하면서 변경 전후내용을 자동기록 및 보존하지 않았고(90건), 변경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한 제3자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74건), 외부주문 직원이 전산원장을 변경(88건)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음

< 전산원장 변경 통제 절차 미적용 내역(2016.12.23.~2020.11.30.) >

관리부서	화면명	변경건수			해당 기간	원장변경 내용	제3자 확인	변경전후 자동기록
			은행 직원	외주 직원				
IT디지털개발부 (舊 IT채널부)	전자금융 정보변경 (본부)	90건 (8명)	52건 (3명)	38건 (5명)	2016.12.23. ~2020.10.13.	고객1일 이체한도금액 등	O	X
IT금융개발부 (舊 IT여신외환부)	연체원장 DUMP 조회/변경	74건 (12명)	24건 (8명)	50건 (4명)	2018.5.14. ~2020.11.30.	현재연체여부, 연체정리연월일 등	X	O

(2) 정보보호위원회 운영업무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의2 제3항 제5호 및 제4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보호위원회의 장이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정한 중요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여야 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을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중소기업은행은 일부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대해 진행 보안통제 관리체계가 아닌 별도의 보안통제 관리체계를 마련·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있어 동 사항을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정한 진행 보안통제 관리체계가 있음에도 인사부만을 위해 접근 통제시스템 및 필수보안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는 등 보안단계가 낮은 별도의 보안 통제 관리체계를 마련·운영

** 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망분리 적용 예외 등 정보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음

< 보안통제 관리체계 운영 현황 >

구분	중요 단말기 보안통제	전행 보안통제	예외 보안통제 (인사부)	비고
서버 통제	접근통제시스템	NodeSafer, DBSafer	미적용	접근통제·기록 및 작업 이력 보관 등을 미수행
	백업	Networker	NetBackup	
단말기 통제	문서보안시스템(DRM)	Fasoo DRM	좌동	복호화 시 정보보호부 승인을 제외하여 운영
	네트워크접근통제 시스템(NAC)	Genian NAC	좌동	필수 보안프로그램 설치 정책 등 예외 적용
	내부정보유출방지 시스템(DLP) ※ 개인정보검색, 출력물관리 포함	GuardZone	WaterWall	인사부에서 해당 보안시스템 운영

(3) 내부사용자 비밀번호 관리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2조 제2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내부사용자의 비밀번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사용자 비밀번호 보관 시 암호화 하여야 하는데도

○ 중소기업은행은 서버 접근통제시스템의 작업이력 로그파일에 내부 사용자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보관*한 사실이 있음

* 작업이력 로그를 샘플 조사(2019.12.2., 2020.5.26., 2020.11.24.)한 결과, 107개 계정의 내부사용자 비밀번호를 평문 보관

< 관련법규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제40조 제1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3호 및 제4호, 제8조의2 제3항 제5호 및 제4항, 제27조 제1항 및 제2항, 제32조 제2호 나목, 제60조 제1항 제2호

관계 법규

1.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2017.10.19. 시행 이후의 것)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 ②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금융회사는 임원을 해임(사임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과태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의2. 제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 1의3. 제7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해임(사임을 포함한다)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자
- ③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이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제출·보고·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별표>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제34조 및 제35조 관련)

- 4.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 5.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임(사임을 포함한다)사실을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 (舊)「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2017.10.19. 시행 전의 것)

제43조(과태료) ① (생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자
 2. 제7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해임(사임을 포함한다)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자
 11.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이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제출·보고·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한 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10.19. 시행 이후의 것)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나. 법 제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1호의2	1,800
다. 법 제7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해임(사임을 포함한다)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1호의3	1,800
누.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제출·보고·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한 경우	법 제43조 제3항	400

□ (舊)「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10.19. 시행 전의 것)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나. 법 제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법 제43조 제3항 제1호	1,000
다. 법 제7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해임(사임을 포함한다)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법 제43조 제3항 제2호	1,000
누.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제출·보고·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한 경우	법 제43조 제3항 제11호	1,000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2017.9.5. 시행 이후의 것)

제3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① 금융회사는 법 제7조제2항·제3항에 따라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사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선임 또는 해임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관련협회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임원을 선임한 경우 : 임원이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과 임원의 임기·담당하는 업무·직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것
2. 임원을 해임한 경우 : 해임 사유 및 향후 임원 선임일정을 포함할 것

②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선임한 경우 : 성명 및 인적사항,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 임기 및 업무범위에 대한 사항
2. 해임한 경우 : 성명, 해임 사유, 향후 선임일정 및 절차

③ 제2항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 (舊)「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감독규정」(2017.9.5. 시행 전의 것)

제3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① 금융회사는 법 제7조제2항·제3항에 따라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사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지체없이 해당 금융회사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관련협회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임원을 선임한 경우: 임원이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과 임원의 임기·담당하는 업무·직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것
2. 임원을 해임한 경우: 해임 사유 및 향후 임원 선임일정을 포함할 것
3. 일반인이 알기 쉬운 표현을 사용할 것
4. 해당 금융회사가 공고한 것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할 것

②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선임한 경우: 성명 및 인적사항,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 임기 및 업무범위에 대한 사항
 2. 해임한 경우: 성명, 해임 사유, 향후 선임일정 및 절차
- ③ 제2항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여부 보고 등) 규정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원의 선임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해임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금융실명법 관련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⑦ 실명거래의 확인 방법 및 절차, 확인 업무의 위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 제1항 제1호·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

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2(행정처분)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생략)
2. 직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 가. 면직
 - 나. 6개월 이내의 정직
 - 다. 감봉
 - 라. 견책
 - 마. 주의

제7조(과태료) ① 제3조·제4조의2 제1항 및 제5항(제4조의2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제4조의3을 위반한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실지명의)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한다.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단서 생략)
2. 법인(「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 등을 포함한다)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단서 생략)
- 3.~5. (생략)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① 금융거래를 할 때 실지명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표·서류에 의하여 확인한다.

1. 개인의 경우
 - 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다만,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에 의하여 확인한다.
 - 나. (생략)

2. 법인인 경우: 제3조 제2호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이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 또는 그 사본
- 3.~5. (생략)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7조 제1항 및 제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가.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조 제1항	500만원
라.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법 제4조의2 제1항 및 제5항(법 제4조의2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	법 제7조 제1항	300만원

<참고>

☐ **금융위원회 「금융실명제 종합편람」**

제1장 금융실명제 업무기준

II. 금융거래 형태별 실명거래 방법

3. 대리인에 의한 거래

- 일반적인 대리의 경우 : 대리인(거래요청자)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대리인으로부터 본인 및 대리인 모두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받아 확인하여야 함
- 가족에 의한 대리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이 본인의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한함)으로 확인되는 서류와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로 실명확인하여야 함

III. 금융거래자별 실명거래 방법

2. 법인 및 임의단체

가. 법인

- 명의인이 법인이고 신청인이 대리인인 경우, 법인의 실명확인증표와 대리인의 실명

확인증표 및 법인 대표자의 위임장(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위임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사용인감계, 사원증 사본)에 의하여 실명확인을 해야 함

☐ 은행연합회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

II. 유형별 대면 실명거래 방법

1. 계좌에 의한 거래

<원칙>

- 가족대리시 청구하는 가족관계확인서류 유효기간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부) : 발급일로부터 3개월

가. 개인(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 명의인의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조부모, 외손자, 배우자 부모(사위, 며느리 포함)

3. 자본시장법 관련

☐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2021.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2(적정성의 원칙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파생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 5. 투자권유대행인 및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
-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9.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286조(업무) ①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3. 다음 각 목의 주요직무 종사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가. 투자권유자문인력(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 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2.9. 대통령령 제31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⑤ 법 제71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제52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이하 이 호 및 제109조 제3항 제1호의2에서 "녹취 대상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하거나 녹취된 파일을 해당 투자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가. 법 제46조 제2항 또는 법 제46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 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녹취대상상품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

나. 70세 이상인 사람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③ 법 제108조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제68조 제5항 제2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투자자와 신탁계약(신탁 재산을 녹취대상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신탁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하거나 녹취된 파일을 해당 투자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10. 그 밖에 수익자의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3.23.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의2(적정성의 원칙) ① 법 제46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파생결합증권. 다만, 금적립계좌등은 제외한다.
2. 법 제93조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3.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0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터. 법 제71조(제7호에 한정한다), 제85조(제8호에 한정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정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정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 제29호	5,000

□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영 제109조제3항제10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8.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에게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

<참고>

□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1-3조(금융투자전문인력의 종류) 금융투자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투자권유자문인력(영문으로는 "Certified Investment Advisor"라 한다) :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 가.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영문으로는 "Certified Fund Investment Advisor"라 한다) : 투자자를 상대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하 "펀드"라 한다)에 대하여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나.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영문으로는 "Certified Securities Investment Advisor"라 한다) : 투자자를 상대로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법 제46조의2에 따른 "파생상품등"에 속하는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거나 영 제7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Money Market Fund)를 자동으로 매수하는 Cash Management Account)에 대하여 투자권유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다.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영문으로는 "Certified Derivatives Investment Advisor"라 한다) : 투자자를 상대로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및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원금보장형 파생결합증권)에 대하여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거나,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자

4.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①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 ②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 및 「전자

서명법」에 의한 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9조(감독 및 검사)

⑥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건전한 운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2.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3. 임원과 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문책의 요구
4.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의 요구

제40조(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와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이하 이 조에서 "외부주문등"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때(전자금융보조업자가 다른 전자금융보조업자와 외부주문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과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제2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8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자
 7. 제22조 제1항(제29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기록을 생성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바. 법 제21조 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 제1항 제1호	5,000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전자금융거래 종류별 안전성 기준) 법 제21조 제2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제8조 부터 제37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인력, 조직 및 예산 부문
2. 건물, 설비, 전산실 등 시설 부문
3. 단말기, 전산자료,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등 정보기술부문
4. 그 밖에 전자금융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의2(정보보호위원회 운영)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중요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정보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5. 기타 정보보호위원회의 장이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 ④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을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전산원장 통제) ①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장애 또는 오류 등에 의한 전산원장의 변경을 위하여 별도의 변경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에는 변경 대상 및 방법, 변경 권한자 지정, 변경 전후내용 자동기록 및 보존, 변경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한 제3자 확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2조(내부사용자 비밀번호 관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내부사용자의 비밀번호 유출을 방지하지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처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담당업무 외에는 열람 및 출력을 제한할 수 있는 접근자의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운영할 것
2. 비밀번호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 가. 비밀번호는 이용자 식별부호(아이디),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포함하지 않은 숫자와 영문자 및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분기별 1회 이상 변경
 - 나. 비밀번호 보관 시 암호화
 - 다. 시스템마다 관리자 비밀번호를 다르게 부여
3. 비밀번호 입력 시 5회 이내의 범위에서 미리 정한 횟수 이상의 입력오류가 연속하여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접속을 차단하고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비밀번호를 재부여하거나 초기화 할 것

제60조(외부주문등에 대한 기준)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외부주문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외부주문등에 의한 정보처리시스템의 개발업무에 사용되는 업무장소 및 전산설비는 내부 업무용과 분리하여 설치·운영
2. 금융회사와 이용자 간 암호화정보 해독 및 원장 등 중요 데이터 변경 금지

5. 중소기업은행법 관련

□ 「중소기업은행법」

제46조(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하고, 업무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독을 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소기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2.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 정지
3.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⑤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의 임원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중소기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업무집행의 정지, 해임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의 직원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중소기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은행의 장에게 면직·정직·감봉·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는 퇴직한 중소기업은행의 임원 또는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중소기업은행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중소기업은행의 장은 이를 퇴직한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는 「은행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8조, 제28조의2제6항, 제3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호, 제31조, 제32조, 제37조 제1항·제2항, 제38조 제1호, 제40조, 제41조, 제43조의3, 제47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제9호, 제48조, 제48조의2, 제50조,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2,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1항 제2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69조 제1항 제2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35조와 「한국은행법」 제56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규정 관련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조(적용범위)

② 이 규정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금융위설치법 및 금융업관련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검사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에 준용한다. 이 경우 "감독원", "감독원장" 및 "금융감독원"은 각각 "금융위"로 본다.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임권고(해임요구, 개선(改選)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3. 문책 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등을 건의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과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건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위반결과 \ 동기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 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감경 사유

-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4)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舊)「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2020.5.13. 시행 전의 것)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3. 예정금액의 산정

나. 감경 사유

-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4)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舊)「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2017.5.13. 시행 전의 것)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3. 예정금액의 산정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기 위반결과	고의	과실
중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75%
보통	법정최고금액의 75%	법정최고금액의 50%
경미	법정최고금액의 50%	법정최고금액의 25%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중 대 :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금융기관 또는 금융소비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및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3) 경 미 : 단순법규 위반 등을 의미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규정 제5조 및 제19조에 의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5. 주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 ② 감독원장은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이사·감사 등과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제재사유에 해당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규정 제19조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이하 "임원등"이라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로서 직원이 주된 행위자인 경우에는 임원등을 조치(함께 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에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통보할 수 있다.

□ (舊)「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2021.5.13. 시행 전의 것)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② 감독원장은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이사·감사 등과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1항에 따른 제재사유에 해당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규정 제19조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이하 "임원등"이라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로서 직원이 주된 행위자인 경우에는 임원등을 조치(함께 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에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통보할 수 있다.

부칙 <제9999호, 2020. 5. 12.>

제3조(적용례) ① 제45조 제2항·제3항, 제50조의5 및 [별표9]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6조의3(미등기 임원에 대한 제재) 이사·감사와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에 대하여는 임원에 대한 제재기준을 준용하여 제재양정을 결정하며,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과한다.

제52조(관련자의 구분) ① 위법·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위자 :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
2. 보조자 : 행위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지시에 따른 자
3. 지시자 : 위법·부당행위를 지시 또는 종용한 자(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위 직급자를 포함한다)
4. 감독자 :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업무를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제64조(제재내용의 기록·유지)

② 금융기관은 이미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위법·부당사실 등을 감독원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퇴직한 직원의 징계대상 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인사기록부에 위법·부당사실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금융업종별 · 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

I. 공통부문

I -1. 금융실명법 위반행위

1. 관련자의 구분

금융실명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① 행위자 : 위반행위를 한 자, 위반행위를 지시 또는 공모한 자 및 위반행위에 적극 개입한 자
- ② 감독자 : 위반행위인 그 업무의 처리를 실질적으로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 ③ 보조자 : 위반행위에 단순 가담하거나 지시를 추종한 자

2. 관련자에 대한 조치기준

① 법 제3조 위반행위(금융실명거래 위반)

거래금액(위반행위 당시의 거래금액. 다만 증권거래계좌의 경우에는 입금액을 말한다)의 다과,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책임정도*		행위자	보조자	감독자
유형①	5천만원 이하	견책	주의 이하	주의 이하
	3억원 이하	감봉 이상	감봉 이하	감봉 이하
	3억원 초과	정직 이상		
유형②		주의 이하	-	-

* 유형① : 차명거래, 고객 동의 없는 임의계좌 개설 등 금융실명거래의 기본 취지를 위반

유형② : 실지명의인의 의사에 부합하는 거래로서 단순절차 위반

(단순절차 위반행위 사항을 시정하는 등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현지조치 포함) 가능)

③ 법 제4조의2(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의무) 및 법 제4조의3(금융거래정보 제공내용 기록·관리의무) 위반행위

책임정도	행위자	보조자	감독자
고의	견책~감봉1월	견책 이하	주의
과실	주의	주의	주의

5. 가중 및 감경

가. 법 제3조 위반행위 관련 계좌수가 5계좌 이상인 경우에는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III. 금융투자부문

III-5.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행위

1. 제재대상

④ (유형 4) 무자격자에 의한 투자권유 (자본시장법 제51조, 제71조제5호)

- 등록된 투자권유대행인 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

2. 제재기준

- 불완전하게 판매된 금액 또는 건수 기준 중 중한 기준으로 제재
- 기관제재시 투자권유대행인의 판매분을 포함 (투자권유대행인은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조치 가능)

구분	판매금액· 건수	제재양정		
		유형 1, 2	유형 3	유형 4
임직원	10억원 또는 50건 이상	문책경고 (감봉) 이상	직무정지 (정직) 이상	문책경고 (감봉) 이상
	1억원 또는 5건 이상	주의적경고 (견책) 이하	문책경고 (감봉)	주의적경고 (견책) 이하
	1억원 또는 5건 미만	주 의	주의적경고 (견책) 이하	주 의
기관	100억원 또는 500건 이상	기관경고 이상	기관경고 이상	기관경고 이상
	50억원 또는 250건 이상	기관주의	기관주의	기관주의

주) 적립식으로 매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판매금액은 총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제19조(과태료 부과와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산운용과 산업금융과 은행과 전자금융과	특수은행검사국 IT검사국
연 락 처	02-2100-2663 02-2100-2864 02-2100-2676 02-2100-2943	02-3145-7196 02-3145-7429